

총파업특보 20호

발행인 김연국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11월 9일

적반하장 김장겸, 천박한 자작극

방문진 도착 5분 만에 자진 철수

오전 10시. 김장겸 사장을 태운 승용차가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 도착했다. “김장겸을 해임하라”는 조합원들의 구호는 더 거세졌다. 질문하려는 언론사 취재진과 조합원들이 몰렸지만, 김장겸은 사측 청경들의 보호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방문진사무실로 향했다.

방문진에 들어선 김장겸에게 부당노동행위와 공정성 훼손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장겸은 회의장을 불과 5미터 앞두고 돌연 “물리적으로 막으면 돌아가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회의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취재진이나 조합원은 없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통로를 터주고 회의실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까지 했다. 방문진에 도착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자작극으로 책임 전가... 이번엔 '허리우드 김'

이후 김장겸은 방문진 이사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조원들의 물리적 겁박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회의장 코앞에서 스스로 발길을 돌려놓고선 ‘물리적 겁박’ 운운하며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은 것이다. 사측 역시 성명을 통해 “무법적인 폭력적 행위”, “집단 겁박 행위” 등의 표현을 써 가며 허위 사실을 호들갑스럽게 떠벌렸다. 애초부터 이사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그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기 위한 ‘자작극’을 기획하고 실행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지난 2012년 파업 당시에도 사측은 “권재홍 보



도본부장이 퇴근길에 조합원에게 둘러싸여 신체에 충격을 입었다”는 거짓 뉴스로 물의를 빚었고, 이후 “(신체가 아닌) 정신적 충격”이라고 말을 바꿔 빈축을 샀다. 공영방송 파괴를 공모한 적폐 세력들은 이제 ‘허리우드 액션’까지 전수하는가.

‘거짓·왜곡·변명’으로 점철된 소명서

김장겸이 서면으로 제출한 12장짜리 소명서 역시 거짓과 왜곡, 궁색한 변명으로 점철돼 있다.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족을 ‘강패’로 매도했다는 복수의 증언과 증거가 있는데도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는가 하면, 부당전보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전임 사장과 다른 임원들 책임이라고 둘러댔다. MBC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없으며 노조의 파업은 새 정권의 부추김에

서 시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한 편의 ‘저질 쇼’... 즉각 해임해야

‘허리우드 자작극’부터 ‘거짓 소명서’까지, 김장겸이 이날 보여준 행보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이자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저질 쇼’였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와 전횡을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기회조차 스스로 걸어찬 파렴치한에게 더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한가. 김장겸은 이미 자신이 MBC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한 공영방송 파괴와 방송 사유화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즉각 김장겸을 해임하라.

유족 강패 발언 없었다?... 뻔뻔한 거짓말

김장겸의 소명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다. 김장겸은 해임안에 대한 서면 소명서에서 가장 먼저 “2014년 4월 25일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족을 강패’라고 지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하나는 자신의 반론이다. 문체의 발언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한겨레> 기사에 자신이 부인하는 반론도 일부 실렸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에 문체의 발언을 들었다는 복수의 증인은 그럼 무엇인가.

세월호 유가족 강패 발언은 당시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다. 앞뒤 맥락까지 상세히 기록된 메모도 있다. 김장겸은 당시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로부터 팽목항 야간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완전 강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발언했고, 박상후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맞장구치기도 했다. 김장겸은 국가의 무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유가족들의 당연한 구조 요구에 ‘국민 수준이

그 정도’라거나 ‘작전 세력이 붙었다’거나 ‘구조하는 사람보다 자기 새끼만 챙기는 이기주의 아니냐’는 식의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난 2014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혐의 처리된 건 ‘명에 훼손’이지, ‘유족 강패 발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선 최근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경영진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분명히 짚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김장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세월호 유가족을 강패로 지칭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발언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 다수의 기사가 김장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사가 작성한 자필 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족 강패 발언’에서 드러난 김장겸의 비뚤어진 인식은 MBC의 세월호 보도참사 전체를 관통한다. 현장 보고를 묵살한 채 ‘전원 구조’ 오보를 즉각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민간 참수사의 죽음을 유족들의 조급증 때문으로 몰아가는 등 유족들을 폄훼하는 보도를 이어갔으며, 관료들의 기념사진 촬영 논란과 같은 구조 당국에 대한 비판 기사들은 누락시키기에 급급했다. 이도 모자라 진실을 밝히려는 세월호 특조위에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왜곡 편파 공세를 퍼부으며 진상조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명백한 사실도 일단 부인하고 보고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도 간단히 왜곡하면 그만인 게 김장겸의 사고방식이다. 폐먹지 않은 말장난으로 방문진을 아등바등 기만하려 들지만, 이른바 ‘애국세력’이 아닌 다음에야 김장겸의 거짓에 농락당할 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방송사유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환노위 청문회 보도의 실상

‘방송사유화’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온 지난 2월 14일 <뉴스 데스크>의 국회 환노위 MBC 청문회 보도에 대해 김장겸은 “당연히 언론이 지적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권력의 개입에 대한 방어적 보도는 자사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학계 의견까지 동원했다. 따져보자. 우선 국회 환노위의 청문회 결정은 2월 13일, 그러나 보도는 하루가 지난 14일이었다. 그런데도, 14일 당일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국정농단’과 ‘탄핵심판’ 뉴스는 다 합쳐서 4개였는데 반해 하루 묵은 MBC 청문회 뉴스는 무려 5개나 쏟아졌다. 물론 청문회와 증인 고발의 이유나 ‘MBC 내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등 사안의 본질은 누락됐다. 심지어 2012년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 칭하면서 팩트까지 왜곡했다. 무엇보다 청문회 출석 대상은 바로 사측 경영진들이었다. 이해당사자인 경영진의 안위만을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재산, 공공재인 전과를 낭비한 것이

다.

이날 <뉴스데스크>의 청문회 보도는 방송의 공정성 의무를 규정된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MBC 방송강령>, <시사 보도 제작준칙> 및 <프로그램 일반 준칙>을 모조리 어긴 보도다. 특히 사측 성명을 그대로 요약해서 읽은 ‘앵무새’ 리포트는, 방송 사업자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일 때 일방적인 주장 전달을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런 ‘앵무새’ 성명 보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때도 반복됐다.

김장겸의 ‘히스토리’... 편파·불공정·왜곡 점철

김장겸은 또, “방송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고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작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나열해

냈다. 김장겸의 ‘히스토리’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다. 정치부장 시절, 김장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청와대 해명이 이해된다”며 보도하지 않았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대형 오보를 냈다. 보도국장 김장겸은 세월호 참사 당시 각종 오보와 유족 폄훼 보도를 양산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왜곡 보도했다. 그가 보도본부장이던 시절에도 MBC 뉴스는 국정교과서 비판 의견을 삭제한 채 정부의 입장만 전달하는 ‘국정 홍보’ 방송이었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한달 간 ‘최순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의도적 은폐’ 방송이었다. 촛불 집회는 폄훼하고 태극기 집회는 띄우는 ‘극우 편향’ 방송의 새 장도 열었다.

‘편파외길’ 30년을 걸어온 김장겸에게 ‘비판과 감시’, ‘중립과 독립’, ‘공정성과 객관성’ 같은 개념들은 어울리지도 않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다. ‘폼격있는 젊은 방송’이라는 슬로건이 김장겸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과 마찬가지로.

사장 땀 본부장 땀, 본부장 땀 사장 땀 ‘6개월’ 사장?... ‘6년’ 실세였다

김장겸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냐고 항변했다. 해임을 목전에 둔 작금의 소명서에도 이런 무책임한 주장은 계속된다. 김장겸은 사장 취임 10여일 만인 3월 10일, 기자와 피디 7명을 구로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로 부당 전보했다. 다수가 기존에 부당 전보를 당했던 피해자였고, 이미 법원에서 부당 전보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그들을 또다시 내쫓았다. 이에 대해 김장겸은 소명서에서 사장인 자신이 아닌 각 본부장들이 재량껏 낸 인사라고 발뺌한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77명을 중징계하고 165명을 부당 전보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표 이사로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이라거나 “전임 사장들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발뺌했다. 김장겸은 2011년 정치부장 시절부터 국장과 본부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던 실세 중의 실세였고, 2013년부

터는 기자들의 인사권을 쥔 보도국장과 보도 본부장이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피의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자기가 사장일 땀 사장 모르게 본부장들이 부당 전보 인사를 했다고 발뺌하더니, 자신이 보도책임자로 있을 땀 전임 사장들의 땀으로 돌리고 있다.

경영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6년도 경영 평가 보고서는 김장겸이 보도 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MBC 보도의 심각한 공정성 훼손과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김장겸의 중대 해임사유가 공식화된 보고서인데도, 김장겸은 자신의 사장 취임 전 일어서서 해임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도본부장 시절 일어난 각종 보도 전횡을 사장이 된 지금 따지지 말라는 해괴한 논리다.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도 남탓이다. 방문진이 해임 사유 중 하나로 MBC 뉴스의 왜곡 편파 보도 때문에 MBC뉴스가 신뢰를 잃고, 급

기야 시청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하자, 김장겸은 “시청률이 2%대로 떨어진 건 자신이 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작년 12월 8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고 변명했다. 이때 역시 김장겸은 보도본부장이었다. 그래도 2%가 창피하기는 했는지, “다음 날엔 MBC 4.3%, SBS 5.8%였고, 다음주 월요일엔 MBC 4.3%, SBS 4.9%였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해임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껏 내놓은 소명 자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유치하고 저급하다.

편파와 왜곡으로 점철된 보도만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부당노동행위는 김장겸의 사장 시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김장겸의 정치부장 시절에도, 보도국장 시절에도, 보도본부장 시절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그의 전횡은 MBC 보도를 망가뜨렸고, 그의 무능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초래했다. 그런 김장겸이 박근혜 정권의 뒷배에 힘입어 사장으로 영전한 자체가 해임사유인 것이다.

노조탄압 없었다? 뉴스도 공정? 유체이탈과 아전인수의 끝판왕

노조 탈퇴 종용 없었다?... 증인만 5명

과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시절의 과오는 지금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김장겸의 유체이탈식 소명은 명백한 팩트마저 부정하는 자기 부정에 이른다. “보직 간부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적이 없다”는 뻔뻔한 거짓 소명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5~6월경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회사 방침이 정해졌다”며 조합원 신분이던 일부 보직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공식적’으로 종용했다. 교대 근무로 이날 편집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일부 보직간부들은 따로 국장실에 부르기까지 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최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증언과 진술이 확보된 증인만 5명이다. 일부 부장은 김장겸의 압박에 못 이겨

조합을 탈퇴했다. 끝까지 탈퇴를 거부했던 또 다른 부장은 결국 보직을 박탈당하고 팀원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증인도 있고 진술도 있는 명백한 사실을 본인만 부정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들을 인정하고 자복했다가는 곧바로 수감 차고 감옥 갈 일이 무섭기 때문일 것이다.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으로까지 이어진다. 방문진이 제출한 해임안엔 MBC뉴스의 신뢰도나 영향력 하락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적시돼 있는데, 김장겸은 해임안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시사IN’과 ‘시사저널’ 설문조사 결과를 느닷없이 거론하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조사기관의 결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문화체육

관광부의 여론집중도 조사에선 ‘MBC가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자화자찬성 반대 논거를 늘어놓는다. 불리한 지표는 정치적이라 폄하하고 유리한 지표는 객관적인 양 제시하는 아전인수도 문제지만, 해임안에 거론된 수많은 다른 지표들을 간단히 묵살한 것도 문제다. 해임안엔 한국기자협회가 현직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MBC 영향력 조사도 있었다. 김장겸이 보도국장이던 2013년 MBC 영향력은 0.7% 신뢰도는 0.5%였다. 2014년엔 그래프에 ‘기타’로 표시될 정도로 더욱 추락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정치적 집단인가?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매년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언론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조사에서도 MBC는 2011년 이후엔 아예 순위권 밖으로 사라졌다. 이 연구소도, 한국언론학회도 정치적인가? 아니면 사장 취임 전 조사라고 또 발뺌할 셈인가.

내일 이사회 속개... 해임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어제(8일) 김장겸이 방문진에서 보인 행태는, 누가 봐도 '허리우드' 액션이자 불출석 쇼였다. 조합원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고, 새 방문진 이사진들도 김장겸의 꼼수에 어리둥절했다. 김장겸을 기다리던 이사들은 '조합원들이 길까지 터졌는데 왜 돌아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만방자하다' '당장 표결을 통해 해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장겸 스스로 해임을 부추기는 꼴이다. 하지만 이완기 이사장은 "어떤 형태로든 질의응답을 통해 김장겸에 대해 소상히 알려야 한다"며 임시 이사회를 정회하

고, 내일(10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장겸 사장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거짓과 궤변으로 가득찬 서면 소명서만 받지 않고 김장겸을 직접 불러 추궁하고 거짓 소명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물론 김장겸이 순순히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태국 세미나를 핑계로 방탄 해외 출장을 떠난 구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도 내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현지 공식 세미나 일정은 오늘(9일) 오후면 모두 끝나기 때문에, 남은 관광 일정들을 취소하고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비행

기를 통해 귀국하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 회의 일정이다. 이를 고려해 이사회 속개 시간도 오후 5시로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태국 외유와 관광이 사장 해임안 논의보다 중요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고수 중이다. 내일 속개되는 이사회도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진 것이다. 태국 일정을 최대한 감안해준 회의 일정들을 다 거부하고 되레 방귀 똥 놔서 성내듯 '이사회 무효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심지어 관광 일정까지 다소화하고 당초 일정대로 모레(11일) 귀국한 뒤 13일에 이사회가 열려도 참석할 수 없다고 우기는 이사도 있다고 한다.

적폐들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줬다. 소명이든 반론이든 항변이든,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건 사실상 이사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의도다. 이들의 이사회 참석과 출석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던 MBC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급박하다. 구여권 이사진들이 회의에 불참하고 김장겸이 출석을 또 거부해도 내일 이사회에선 사장 해임을 처리해야 한다. 김장겸 해임과 동시에 착수할 공영방송 재건 작업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을 만큼 MBC가 한가한 상황이 아니란 점은 새 방문진 이사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해임 시계를 늦추고 멈추려는 적폐들의 발악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한 청산의 결단을 새 방문진에 거듭 촉구한다.

거짓 궤변 김재철...구속수사 임박



법원, 오늘 김재철 영장심사

피의자 김재철의 구속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재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 결정은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김재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MBC 임원진이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했으

며, 김재철이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재철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 문건대로 PD수첩 등 정부 비판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출연진 등을 교체하거나 방영을 보류하고, 제작을 중단시킨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MBC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검찰이 이러한 범죄 혐의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재철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언이나 정황을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MBC 구성원 771명, 구속 요청 탄원서 제출

하지만 김재철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거짓 궤변으로 일관했다.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재철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MBC 전체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771명의 구성원들도 김

재철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MBC 구성원들은 탄원서에서 '알량한 사장 자리 하나 연명하고자 MBC를 정권에 갖다 바치고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낸 장본인이 바로 김재철'이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파괴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공범자이자 부당징계 해고 등을 실행한 부당노동행위의 주범 김재철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고 MBC와 후배들을 팔아먹었다.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범죄 행위들을 자행했다. 관련 증거가 드러난 지점에서야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정도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국가기관과 공모해 헌법을 유린한 김재철은 구속돼야 마땅하다. 또, 구속을 통한 철저한 수사도 김재철의 범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응당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응징하고 바로 잡는 '적폐 청산'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미래와 재건을 위해서도 김재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